



Monthly Customs Newsletter



【 대표관세사 인사말 】

메르스가 종식되고 어느덧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8월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첫 주말인 1, 2일에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7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니 한여름이 실감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Work & Life Balance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상반기에 열심히 달렸다면 무겁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충전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연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체력 관리도 잘 하시기길 바라겠습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이메일 해킹 통한 무역대금 사기 어떻게 예방할까?

최근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바이어에게 보낸 이메일을 해킹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꾸미는 사례가 많아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피해건수가 2013년 44건에서 지난해엔 71건, 올해도 6월까지 61건이 접수돼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월 29일 밝혔다. 피해 금액도 2013년 370만 달러에서 지난해 547만 달러로 48%나 급증했다.

무협은 이러한 현상을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터넷 활용 범죄도 같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거래당사자 간 이메일을 해킹한 후 무역대금지급 단계에서 범행용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이메일 해킹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주요 이메일 서비스업체인 다음, 네이버 등에서는 해외접속 차단, 특정 아이피 차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00%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협은 무역거래 시 작은 관심만으로도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대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상호 간 계좌 확인을 생활화하고, ▲대금지급방식을 T/T(현금지불방식)에서 L/C(신용장)방식으로 변경하며, ▲계약서상 대금지급 계좌를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무부와 함께 무역업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월 26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무역대금사기 사례 유형, ▲이메일 서버등록제를 활용한 해킹 예방, ▲피해 발생 시 법률적 처리방안 등을 업계에 홍보하고 전문가와의 사례별 1:1 상담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무협 장상규 회원지원본부장은 "이메일 해킹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업계에서는 남의 이야기 정도로 인식한다."며, "전화를 통한 계좌번호 확인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무협과 경찰청, 그리고 법무부의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 대응 방안 설명회는 올 7월 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설 예정이다.



【 관세동향 】

▶ 계속되는 엔저에 日 '방긋', 韓 '울상'

원/엔 환율 900원 선이 붕괴되고, 원/엔 실질실효환율이 163.8p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HRI)은 6월 25일 발표한 '엔저에 따른 한일 수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수출금액을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으로 구분해 엔저 현상이 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엔저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양국의 달러 표시 수출가격 추세를 분석한 결과, 원화 강세 지속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수출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 섬유, 금속, 기계, 전자 등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일본보다 악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국의 수출물량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물량 증가세는 꾸준히 둔화하고 있으나, 일본은 올해 들어 수출물량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증가세를 추월했다.

이 두 자료를 토대로 가격 및 물량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가격 하락에도 물량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일본은 가격 하락에 힘입어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수출가격 하락에도 물량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일본은 감소하던 수출물량이 지난해 이후 증가세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HRI는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물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을 잠식해 수출 경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 대응방안으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안정화 대책,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원/엔 환율의 변동성 축소와 엔저 현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환위험 피해에 대응해 무역보험, 유동성 지원, 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세동향 】

▶ 이란 제재해제 임박 '제2의 중동붐' 찾아올까?

높은 對중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대상국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35년간 국제 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월 22일 발표한 '빛장 풀리는 중동의 제조국, 이란을 선점하라' 보고서에서, 이란 핵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對이란 경제 제재도 점차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올 4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마련에 최종 합의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모든 세부사항의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는 점차 유예 또는 해제될 것이며, 특히 이란으로 들어가는 상품과 자금을 개방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해운 및 일부 금융제재는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란의 핵심 산업인 에너지 관련 제재는 완전 해제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방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이행하도록 이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중동지역 제2의 경제대국이자 제조대국이다. 이란은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이 GDP의 44%를 차지하며, 제재 중에도 에너지 이외 자국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 등 국내생산을 장려했다.

실제로 2011년 164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한 중동 최대의 제조국이다. 제재가 해제돼 이란 경제가 살아나면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부품 포함), IT, 소비재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재 중에서는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화장품, 가공식품 등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와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부문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제무역연구원 홍정화 연구원은 "핵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경쟁국의 이란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시장 개방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수출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동향 】

▶ 아프리카 시장 개척 위해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최대 규모의 민관경제사절단을 동부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경제 대국인 남아공, 모잠비크에 파견했으며,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수출과 해외 플랜트·인프라 건설 수주 실적을 아프리카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산업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OTRA,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포스코, LG상사,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우암코퍼레이션, 수성엔지니어링, 정인무역 등 30여개 기관·기업 55여명이 참여했다.

사절단은 6월 29일 탄자니아 산업무역부, 건설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주요 기업 등 250여명의 양국 정부와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과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인무역과 탄자니아 정부기관인 SUMA JKT 간 트랙터 61대(125만 달러의 상당)의 농기계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플랜트·인프라 건설 수주 관련 상담을 펼쳤다.

더불어 양국 기업 간 1:1 수출 및 수주 상담을 계속해서 구체적인 후속 성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꾸준한 지원을 위해 대한상외와 탄자니아상의 간 MOU도 체결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행사에서 탄자니아의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탄자니아 경제특구 개발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협력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경제사절단은 탄자니아에서 거둔 협력성적을 남아공과 모잠비크에서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양국 간 1:1 비즈니스 상담 중심의 협력을 우선 추진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성적을 끌어내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방문 3개국에서 해외건설 수주 확대 및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기존 양국 간 에너지·건설 중심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시장 확대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 10월 중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에 아프리카 주요국 고위 정부인사와 기업 CEO 등을 초청해 1:1 상담회, 인력·기술·장비를 연계한 협력을 추진해 이번 경제사절단 파견의 추진성적을 계속 이어가 실질적인 협력성적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관세동향 】

▶ 최근 수출부진, “현지 수요 감소 컸다”

올 들어 우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둔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인건비, 주력 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측면의 수출경쟁력 약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월 7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4대 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 변화를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수출 부진은 주요국의 현지 수입수요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CMS 모형은 일정 기간의 수출 증감액을 경쟁력 요인, 상품구성 요인, 수요 요인 등으로 나눈 것으로, 경쟁력 요인은 시장점유율 변화를 반영하고, 상품구성 요인은 수요 호조(부진) 상품과 우리 상품의 정합성을 보여주며, 수요 요인은 현지 경기, 구조적 요인 등을 반영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감소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4월까지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5월 들어 소폭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원유 관련 제품(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며,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EU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 1분기 중 중국, 일본, EU시장에 대한 수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쟁력 요인은 수출 확대에 일조했으나, 현지 수요 부진이 더 큰 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시장은 현지 수요 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나, 경쟁력 요인에 따른 수출 확대가 對미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경쟁력이 떨어진 품목도 많았다. 對중 수출은 휴대폰, 디스플레이, 철강제품 등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對미 수출은 휴대폰, 對일 수출은 철강제품, 석유제품, 對EU 수출은 휴대폰, 선박 등에서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강내영 연구원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최근 수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동향 】

▶ 관세청, 시내 면세점 4개 특허사업자 선정

서울과 제주에 문을 열 면세점 사업자로 서울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SM면세점을, 제주는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올 2월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6월 1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일반경쟁에 7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14개,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3개 기업이 신청해 정부·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업체와 관련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서울 일반경쟁에서 전체 위원의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2개 업체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를 특허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서울과 제주의 중소·중견 제한경쟁에서는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SM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를 각각 선정했다.

또한 기존 시내면세점의 투자·고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추가 특허로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와 4,600여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조기 달성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 우리나라가 관광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허심사 선정 업체는 영업 준비를 완료한 후 특허를 부여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중소·중견 제한경쟁으로 선정한 업체는 5년의 범위에서 1회 갱신을 허용해 길게는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 관세동향 】

▶ 정부, “어쩔 수 없다” 쌀 4만 1,000톤 수입 결정

정부가 밥상용 쌀 3만톤을 포함해 총 4만 1,000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해외에서 반드시 들여와야 하는 의무수입물량(MMA)은 없어졌지만, ‘관세율 513%’ 관철을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3일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 쌀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TRQ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7월 3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TRQ란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선 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쌀 관세화 선언 이후 올해부터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지만, 연간 40만 8,700톤에 대해선 5%의 저율 관세로 쌀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즉 ‘의무수입물량’이 ‘자유수입물량’이 됐지만, 기존에 쌀을 들여오던 나라와의 관계나 우리가 제시한 고율의 관세화를 무리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입찰 물량은 용도별로는 밥쌀용 3만톤, 가공용 1만 1,000톤, 곡종별로는 단립종 1만톤, 중립종 2만톤, 쇠미 1만 1,000톤이며, 밥쌀용은 올 5월 가격조건 부적합으로 유찰된 물량인 중립종 1만톤을 포함했다. 입찰 결과는 7월 31일 입찰 이후 견본품 검사, 응찰가격 개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입이 입찰에서 도입까지 보통 4~5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입찰 물량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TRQ 쌀은 현재까지 6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27만 4,525톤이 낙찰됐으며, 이 가운데 10만 9,479톤이 국내에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TRQ 쌀 입찰을 통해 밥상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판매 시기 및 판매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해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경찰과 합동 특별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FTA 뉴스]

▶ 한·EU FTA 발효 4년 차 농축산물 수입·수출 모두 늘어

우리나라와 EU가 FTA를 체결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EU FTA는 우리나라 농축산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행 3년 차인 지난해와 비교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EU FTA 이행 4년 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3년 차보다 확대했고,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졌다. 이행 4년 차 EU産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 차보다 8.9% 증가한 36억 8,000만 달러며, 對EU 수출액은 15.7% 오른 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EU産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9%로 지난해보다 9.1%p가 상승했고, 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로 지난해보다 5.7%p 올랐다.

하지만 이행 4년 차 EU産 농축산물 수입은 FTA 이행 초기로 관세 인하 등의 FTA 효과보다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 및 수입 전환 효과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EU産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PED, FME 발생 여파에 따른 국내産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행 3년 차보다 58.0%가 늘었다. 유제품 수입량은 FTA TRQ 확대, 주요 수출국의 증산에 따른 수입 단가 하락 및 국내 수요 증가로 25.9%가 증가한 반면, 곡물 수입량은 미국 등으로의 수입선 전환으로 33.9% 줄었다. 주류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3년 차보다 20.2%나 증가했다.

한편 관세 하락 폭 확대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커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행 4년 차 관세 하락에 따른 EU産 돼지고기, 유제품, 곡물(옥수수, 보리, 밀), 주류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7~13%, 8~64%, 4~35%, 11~17%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 KREI는 "한·EU FTA 이행으로 국내 축산업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 관련 국내보완대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가축 질병의 예방 및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EU産을 포함한 수입 농식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종과 국산 원료 가공식품 개발·보급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TA 뉴스]

▶ 한·중 FTA 발효 대비 1만여 對중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

관세청은 올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이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간 펼친 '한·중 FTA 발효 대비 1단계 100일 특별지원'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1단계 특별지원은 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활용지원 체계 구축, ▲활용 인프라 확대, ▲활용안내 홍보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 전국 30개 세관에 '차이나센터'를 열고, 총 1만 2,940여개의 對중 수출기업에 FTA 활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산지관리에서부터 활용시스템 구축, 증명서 발급절차 및 중국 통관정보 등 FTA 활용과 관련해 상담하고 안내했다.

특히 지역 공단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마련하고, 전국의 산업단지 등을 찾아 FTA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362개 중소기업에도 맞춤형 상담을 펼쳤다. 아울러 한·중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 FTA 활용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FTA 활용 준비와 원산지증명, 상대국 검증 대비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보급하고, 원산지증명서(C/O) 원스톱 발급시스템 및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FTA-PASS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관세청이 개발해 보급한 것으로, 원재료 등록과 FTA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류 발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현재 약 1만 2,350여 기업이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해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중 FTA에 철저히 대비하는 차원에서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CEO 리포트'를 발간하는 한편, 신규 FTA 비즈니스 모델 제공, 기업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관세청은 1단계 특별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기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상담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중 FTA 발효 시점에 맞춰 '2단계 100일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해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100% 활용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TA 뉴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미국에서 가스보관용 용기를 수입해 일정 기간 후 재수출할 예정이다.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에 따른 감면 신청 및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일시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 등) 제1항에서는 일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도 관세면제 대상물품을 전시물품, 운동경기용 물품, 상용견품, 직업용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스용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97조 조항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감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해야 할 세액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세율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구비, 직접운송,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일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97조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일 경우 적용받은 협정세율에서 재수출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면세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 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 시 포장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이며,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은 제외한다.

또한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포장용품은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